

O1.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업관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 ② 관료의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킨다.
- ③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④ 우리나라도 대표관료제적 임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답] ① 대표관료제는 임용할당제로써 실적에만 의존하는 실적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 대표관료제의 특징과 한계

- 실적제와의 상충
- 행정의 전문성·생산성 저해
- 재사회화(공직입문 후 신념 변화) 불고려
- 역차별 우려 : 기회의 공평 저해
- 외부통제 무력화 : 국민참여나 협력적 통치(거버넌스) 등저해 ⇒ 국민주권원리에 반함
- 경험적 입증 부족 : 능동적 대표
- 구성론적 대표의 기술적 한계
- 특정집단에의 악용 : 집단이기주의
- 정부규모 팽창 소지 ⇒ 감축관리·NPM 등 생산성·효율성이 강조되는 행정과 충돌

O2.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의 핵심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효율성 강조
- ㄴ. 실증주의적 연구 지향
- ㄷ. 적실성 있는 행정학 연구
- ㄹ. 고객중심의 행정
- ㅁ. 기업식 정부 운영

- ① ㄱ, ㄴ ② ㄴ, ㄷ
- ③ ㄷ, ㄹ ④ ㄹ, ㅁ

[답] ③ 신행정학은 1960년대 말 미국 사회의 격동기 시기에 빈곤, 차별, 소외, 폭동 등 절박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한 이론으로 논리실증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행태론에 대한 반발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신행정학은 적실성(relevance)과 실천성(action)을 지향하며 가치주의와 정책지향주의를 제창하였다.

- ☑ ㄱ [X] 효율성이 아니라 형평성과 정의를 중시한다.
- ㄴ [X] 실증주의 대신 현상학적 연구를 지향한다.
- ㄷ [O] 적실과 실천성을 강조한다.
- ㄹ [O] 신행정학도 소외계층 등 고객 중심의 행정을 강조한다.
- ㅁ [X] 기업식 정부는 신행정론 이후인 신공공관리론에서

강조된 시장지향적 정부운형을 말한다.

● 신행정론의 주요 특징

- 사회적 형평 등 행정의 새로운 가치 중시 : 가치주의, 인본주의 행정학
- 격동에의 대응과 행정의 독립변수적 역할 및 적극적 가치관 중시 : ‘관조’가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자로서의 ‘실천’하는 적극적인 행정인 중시, 적실(relevance)과 실천(action) 강조
- 정책 및 문제지향성 : 정치행정신일원론
- 행태론의 지양과 현상학적 접근법 추구 : 간주관성 및 능동적, 사회적 자아 중시
- 과학적 방법을 포기(배격)한 것은 아님 : 과학적 지식을 문제 해결에 활용할 것을 주장
- 사회적 적실성·기술성(처방성)·대응성 강조
- 후기관료제모형 : 계층제의 타파로 민주적·동태적·도덕적·분권적·다원적 조직 주장
- 고객지향적 행정과 민주적 행정 모형 강조 : 수익자의 참여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O3. 관료제 병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규칙이나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목표와 수단의 대치 현상이 발생한다.
- ② 모든 업무를 문서로 처리하는 문서주의는 번문욕례(繁文縟禮)를 초래한다.
- ③ 자신의 소속기관만을 중요시함에 따라 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나 조정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 ④ 법규와 절차 준수의 강조는 관료제 내 구성원들의 비정의성(非情誼性)을 저해한다.

[답] ④ 막스 베버의 관료제는 법규와 절차에 의한 행정을 강조함으로써 감정 및 편견 없이 보편타당한 행정을 지향하는 비정의성(impersonalism)을 지향한다.

● 근대관료제

특징	병리
·계층제	·민주성·대표성 제약
·법 앞의 평등	·동조과잉(목표전환)(Merton)
·문서주의	·번문욕례
·공·사 분리	·인격 상실
·전문지식(실적관료제)	·전문가적 무능
·전임직(직업관료제)	·할거주의 (Selznick)
·비개인화(impersonalism)	·변동에 대한 저항
	·독선주의, 기밀주의
	·피터의 원리 (Peter)
	·심리적 불안정성 (Thompson)

O4. 계급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의 신분안정과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한다.
- ② 인력활용의 신축성과 융통성이 높다.
- ③ 정치적 중립 확보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 ④ 단체정신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 확보에 유리하다.

[답] ③ 계급제는 직업공무원제, 폐쇄형, 일반행정가주의 (generalism)과 연관되며 전문성을 저해한다. 폐쇄형이므로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할 수 없고 직무의 성질별로 업무가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직무상 황적이동이 활발하여 전문성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 ☑ ① [O] 계급제는 폐쇄형이므로 공무원의 신분 안정과 직업 공무원제에 기여한다.
- ② [O] 계급제는 엄격한 분류구조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인력활용의 신축성과 융통성이 높다.
- ④ [O] 계급제는 직무보다는 조직 중심의 분류제도이므로 조직에 대한 애착과 충성심 확보에 유리하다.

계급제의 장·단점

계급제의 장점	계급제의 단점
① 특정 직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보다 장래의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사람을 채용하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좀 더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흡수할 수 있다.	① 동일계급 하에서는 직무종류·성격에 관계없이 동일보수가 지급되므로 직무급 체계를 확립하기 어렵다.
② 전직·전보가 용이하고 승진의 폭이 넓으므로 인사관리의 탄력성이 크고, 따라서 공무원이 조직 단체에 대한 폭넓은 시각과 이해력을 갖게 되어 공무원의 능력이 다방면에 걸쳐 발전할 수 있고, 일반 행정가의 양성에 유리하다.	② 여러 직책을 옮겨다니므로 행정의 전문화에 부응하지 못한다.
③ 공무원들로 하여금 직업적 연대의식과 일체감을 갖게 하고, 부처 간 조정이 용이하다.	③ 직급 간 차별이 심하므로 독단적 결정의 가능성이 높고 엘리트의식에 빠지기 쉬워 의사결정의 합리화나 적실성을 기대하기에 어렵다.
④ 일반적으로 폐쇄형으로 운영되므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이 용이하다.	④ 폐쇄형을 유지하므로 무사안일에 빠지거나 특권집단화 할 가능성이 높다.
⑤ 계급수가 직위분류제의 직급 수에 비하여 적기 때문에 인사관리가 수월하고 비용도 절감되며, 분류구조와 보수체계가 단순하고 융통성이 있으므로 인력활용의 융통성과 효율성을 높여준다.	⑤ 직위에 알맞은 적임자를 채용·배치하지 못하여 행정의 능률이 저하된다.
	⑥ 직위 간의 직무경계가 불명확하여 갈등이 생길 소지가 많으며, 업무의 전가가능성이 높아 행정업무의 지연 및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O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김포시와 도로교통공단은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 ② 관세청장은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당연직위원장이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이다.

[답] ③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한다.

- ☑ ① [O] 김포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나 도로교통공단과 같은 공공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 ② [O] 관세청장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므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④ [O]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이 되고, 위원 중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O6.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대표적인 모형은 사바티어(Sabatier)의 정책지지연합모형 (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이다.
- ②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본다.
- ③ 집행현장에서 일선관료의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
- ④ 안정되고 구조화된 정책상황을 전제로 한다.

[답] ③ 상향식 정책집행은 집행현장 상황에 따라 정책목표와 전략을 유연하게 수정하는 접근법으로 집행현장에서 일선관료의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

- ☑ ① [X] 사바티어의 정책지지연합모형은 대표적인 통합형 모형이다. 사바티어는 처음에 하향식을 주장하다가 통합형인 정책지지연합모형을 주장하였다.
- ②④ [X] 하향식 집행의 특징이다.

상향적 접근과 하향적 접근의 비교

비교	하향적 · 전방향적 접근	상향적 · 후방향적 접근
학자	1970년대, Van Meter, Van Horn, Sabatier, Mazmanian, Edwards	1970년대 말~80년대 초, Elmore, Lipsky, Berman
분석 목표	성공적 집행의 좌우요인 탐구 (예측/정책건의)	집행현장의 실제 상태를 기술·설명
정책과정 모형	단계주의자 모형	융합주의자 모형
집행과정 특징	계층적 지도	분화된 문제해결
민주주의 모형	엘리트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평가기준	공식적 목표의 달성도(효과성) 정책결정자의 의도를 실현하는 것이 성공적 정책집행이라고 파악. 정치적 기준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도 고찰하지만 이는 선택기준	평가기준 불명확(집행과정에서의 적응성 강조). 집행의 성공은 결정자의 의도에의 순응 여부보다는 집행자가 주어진 여건 하에서 역할의 충실한 수행이라는 상황적 기준을 중시
전반적 초점	정책결정자가 의도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행체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초점을 둠.	집행네트워크 행위자의 전략적 상호작용
적응상황	핵심정책이 있고 비교적 구조화된 상황에 적합	핵심정책이 없고 독립적인 다수행위자가 개입하는 동태적 상황에 적합
Berman	정형적 집행	적응적 집행
Elmore	전방향적 집행(Fordward Mapping)	후방향적 집행(Backward Mapping)
Nakamura	고전적 기술자형, 지시적 위임가형	재량적 실험가형, 관료적 기업가형

07.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론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욕구의 계층화를 시도한 점에서 매슬로(Maslow)의 욕구단 계이론과 유사하다.
- ② 불만을 주는 요인과 만족을 주는 요인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 ③ 무엇이 동기를 유발하는가에 초점을 두는 내용이론으로 분류된다.
- ④ 작업조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근무태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답] ① 허즈버그의 욕구충족 2개요인 이론은 불만을 주는 요인인 위생요인과 만족을 주는 요인인 동기요인이 서로 별개임을 강조하는 이론이지 두 요인 간의 계층화를 강조하지는 않았다.

08.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감사원은 「정부조직법」에서 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한다.
- ②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다.
-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④ 특허청은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이 부여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한다.

[답] ④ 특허청은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이 부여되고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중앙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한다. 책임운영기관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책임운영기관과 소속기관 형태인 책임운영기관이 있는데 특허청은 유일한 중앙행정기관이자 책임운영기관이다.

- ☑ ① [X] 감사원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나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헌법상 기구이다.
- ② [X]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며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무자본 특수법인이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설립).
- ③ [X]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가 아니라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09. 공익(Public interest) 개념의 실체설과 과정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실체설은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본다.
- ② 과정설의 대표적인 학자에는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가 있다.
- ③ 실체설은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 ④ 과정설은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입장이다.

[답] ③ 실체설은 공익이 사익의 합이 아니라 별도의 실체로써 존재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개개인의 이익이 희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 ☑ ① [X] 과정설의 특징이다.
- ② [X] 실체설을 주장한 대표적 학자이다.
- ④ [X] 실체설의 특징이다.

공익과 사익의 관계

1. 연속론적인 입장(개인주의 공익관): 공익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과정설의 입장으로서 공익은 사익의 합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A. Smith의 예정조화관, 자유방임주의: Σ 사익 = 공익		
개 인	가 격의 매개변수 ⇔ 시 장	사 회
자기효용극대화 행위(자유방임) 개인적 합리성 추구(사익추구)		자원배분의 효율성(파레토 최적) 사회적 합리성 달성(공익달성)

2. 불연속론적인 입장(집단주의 공익관): 공익의 상대적 특수성을 인정하는 실체설의 입장이다.

- (1) 시장실패: Σ 사익 $\neq$ 공익, ① 공유지의 비극, ② 죄수의 딜레마, ③ 구성의 모순, ④ 절약의 역설
(2) 정부실패원인으로서 인간의 이기적 경향: 공익보다는 사익, 특수이익, 부처이익을 중요시 하는 경향 - 행정조직의 내부성, 관료의 도덕적 해이(행정부패), 포획현상, 지대 추구행위, 첩의 삼각(하위정부), 이익집단 자유주의, 관료이익극대화기설

10. 전략적 인적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장기적이며 목표·성과 중심으로 인적자원을 관리한다.
② 개인의 욕구는 조직의 전략적 목표달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③ 인사업무 책임자가 조직 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④ 조직의 전략 및 성과와 인적자원관리 활동 간의 연계에 중점을 둔다.

[답] ②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는 구성원을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자산으로 여기며 개인의 욕구와 조직목표 간의 조화, 일과 삶의 균형 등을 중시하는 인본주의 인사관리를 의미한다.

● 전통적 인사관리와 인적자원관리

구분	전통적 인사관리	인적자원관리
구성원에 대한 인식	비용(cost), 통제대상	자원(resources), 자산
이론적 배경	과학적관리론	후기인간관계론
주된 관심	조직의 성과 (생산성) 향상	조직의 성과와 개인의 행복 조화(근무생활의 질 중시)
주요 특징	·하향적·집권적관리 ·규칙과 절차 중시 ·경직적 ·X이론과 통제	·상향적·분권적 관리 ·성과와 책임 중시 ·신축성과 융통성 ·Y이론과 참여
관리 전략	교환형 관리	통합형 관리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②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③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④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답] ②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으며 ①③④는 모두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한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 1.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배적인 엘리트집단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이슈라도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 논의하려고 한다.
- ② 무의사결정은 중립적 행동으로 다원주의이론의 관점을 반영한다.
- ③ 집행과정에서는 무의사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 ④ 정책문제 채택과정에서 기존 세력에 도전하는 요구는 정책문제화하지 않고 억압한다.

[답] ④ 무의사결정이란 정책문제 채택과정에서 기존 세력의 이익에 도전하는 이슈나 요구를 정책문제화하지 않고 이를 억압하는 것으로 지배적인 엘리트 집단에 의해서 행해지는 현상이다. 따라서 무의사결정이론은 신엘리트이론의 관점을 반영한다.

- ☑ ① [X] 지배계층의 이해관계와 부합되지 않는 이슈는 기각방치시키려고 한다.
- ② [X] 다원주의가 아니라 신엘리트이론의 관점이다.
- ③ [X] 무의사결정은 좁은 의미로는 주로 의제설정과정에서 나타나지만 넓게는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13.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점증모형 - 기존의 정책을 수정 보완해 약간 개선된 상태의 정책 대안이 선택된다.
- ② 최적모형 - 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은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③ 혼합주사모형 - 거시적 맥락의 근본적 결정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합리모형의 의사결정방식을 따른다.
- ④ 쓰레기통모형 -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에서 어떠한 계기로 인해 우연히 정책이 결정된다.

[답] ② 최적모형은 Y.Dror가 주장한 모형으로 정책결정자의

직관적인 판단이나 초합리성 등을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한다.

14. 다음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간 퇴직 전 ㉡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

- ① 3년 5년
- ② 5년 3년
- ③ 2년 3년
- ④ 2년 5년

[답] ①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취업제한 의무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로 퇴직하는 공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공직자 취업제한 의무

대상자	퇴직 전	퇴직 후	대상기관	근거법률
재산등록자	5년 이내	3년간	사기업체	공직자윤리법
비위면직자	5년 이내	5년간	공사기업	부패방지법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의무

- ① 적용대상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 ㉠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감사 및 조세·건축·토목 등 인허가부서 근무자는 5~7급 공무원도 해당
 - ㉡ 공직유관단체 임원(상근 이사·감사 이상), 일부 공직유관단체 직원(금감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 ② 기간 : 퇴직 후 3년
- ③ 내용 : 퇴직 전 5년 간 소속부서(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 업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
- ④ 심사 : 취업 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관련성 유무 확인, 취업승인
- ⑤ 적용 제외 :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관련업체로 취업하는 경우는 취업심사 없이 취업 가능

변호사 ⇨ 법무법인 등, 회계사 ⇨ 회계법인, 세무사 ⇨ 세무법인
그러나 재산공개대상자는 자격증이 있더라도 사전 취업심사대상임.

- ⑥ 위반시 제재
 - ㉠ 퇴직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로 취업하거나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위반자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 ㉡ 해임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과

-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인에 대해 고발조치
- ㉡ 취업제한 위반의 죄(제29조 제1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5.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쉬크(Schick)는 통제-관리-기획이라는 예산의 세가지 지향(orientation)을 제시하였다.
- ② 영기준예산제도(ZBB)가 단위사업을 사업-재정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예산편성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계획예산제도(PPBS)는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조건을 먼저 고려한다.
- ③ 우리나라는 예산편성과 성과관리의 연계를 위해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④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주기적으로 공표해 조세지출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답] ② ②는 반대이다. 계획예산제도(PPBS)가 단위사업을 사업-재정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예산편성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영기준예산제도(ZBB)는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조건을 먼저 고려하는 단기적인 예산제도이다.

16.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둔다.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 ④ 지방자치법은 원칙적으로 사무배분방식에 있어서 포괄적 예시주의를 취하고 있다.

[답] 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설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둔다.

17.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 측면에서 단층제로 운영되고 있다.
- ② 자치계층은 주민공동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의 단위로서 정치적 민주성 가치가 중요시된다.
- ③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자치구를 둘 수 있다.
- ④ 자치계층으로 군을 두고 있는 광역시가 있다.

[답] ③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에 자치구와 군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와 군 등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도록 하고 있다.

● 지방자치법 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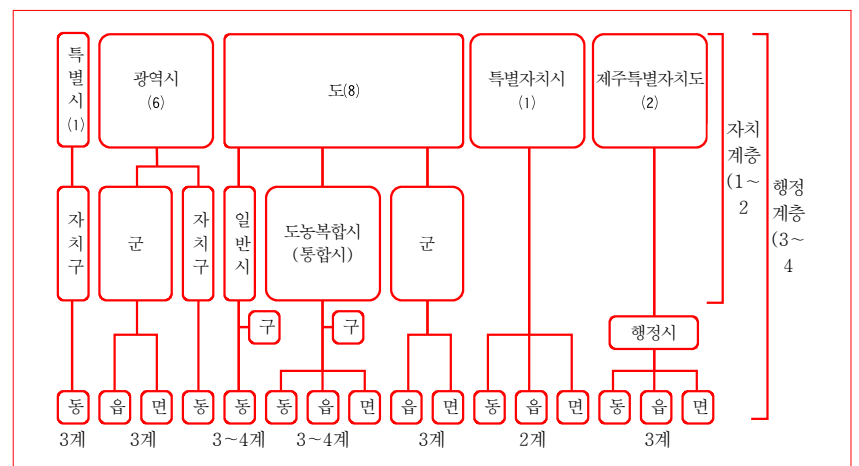
-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① 정부의 직할(直轄)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한다.
-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

자치계층과 행정계층

우리나라는 단층제인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자치계층은 중층제의 구조를 띠고 있다. 행정계층에 있어서는 읍·면·동 등 행정계층을 두고 있으므로 행정계층 상으로 볼 때는 3~4개의 계층을 두고 있다(자치계층포함).



18. 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행정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X비효율성은 과열된 경쟁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과도한 비용발생을 의미한다.
- ② 지대추구이론은 규제나 개발계획과 같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클수록 지대추구행태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 ③ 거래비용이론에서는 당사자 간의 협상 및 커뮤니케이션 비용과 계약의 준수를 감시하는 비용도 거래비용으로 포함한다.
- ④ 대리인이론은 주인-대리인 사이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답] ① 정부실패 요인 중 x의 비효율이란 정부업무가 경쟁 상태에 노출되지 않은 독점적 성격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과도한 비용발생과 비효율을 의미한다.

19. 공공서비스 공급주체의 유형과 예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① 준시장형 공기업 - 한국방송공사
- ② 시장형 공기업 - 한국마사회
- ③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한국연구재단
- ④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한국소비자원

[답] ④ 한국소비자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 ☑ ① [X] 한국방송공사는 이론상으로는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공기업에 해당하지만 실정법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다. 이유는 언론기관이기 때문에 언론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EBS도 유사한 사례이다.
- ② [X] 한국마사회는 시장형 공기업이 아니라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한다.
- ③ [X] 한국연구재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 공공기관의 구분(2017 기준)

- ① 시장형 공기업: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 ② 준시장형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14)	(산자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6)	(재정부) 한국조폐공사, (문화부)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자부) 대한석탄공사,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준정부기관

- 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 ②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6)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문화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회관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산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금융위)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4)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미래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3) 기타 공공기관: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

기타 공공기관(20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	---

20. 재정성과관리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사후예산제도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추구한다.
- ② 통합재정수지는 재정건전성 분석, 재정의 실물경제 효과분석, 재정운용의 통화부문에 대한 영향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 ③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시작된 대형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관리해 지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도모한다.
- ④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제도이다.

[답] 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하는 지침에 따라 자치단체가 매년 5회계연도 이상에 해당하는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이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지방재정을 사전에 통제하는 제도이다.

● 지방재정법 제33조 우리나라 재정통제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우리나라 재정통제제도

통제 제도	권력성	사전성	주체
① 예산편성지침시달제	권력적	사전 통제	행정 통제
② 지방채발행승인제도	통제		
③ 재정투자심사제도	비권력적 통제	사후 통제	
④ 중기지방재정계획			
⑤ 지방재정진단제도			

재정상 통제

- (1) 예산 및 결산 보고: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및 결산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2) 지방채 발행의 통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3) 보조금 사용에 관한 감독: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토록 할 수 있다.
- (4) 지방재정진단제도(「지방재정법」 제54조~제55조)
- (5)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업무편람에 의한 통제(「지방재정법」 제38조)
 -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재정의 운용 여건,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
 - ②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영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6)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통제(「지방재정법」 제33조)

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7) 재정투자심사제도: 자치단체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시 또는 지방의회에 채무부담행위 등의 의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야 하고 총사업비 500억 이상 신규사업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해야 한다.